

북한의 제3차 핵실험 위협 배경 분석

전 현 준 (북한연구센터 선임연구위원)

Online Series CO 13-05

북한 로켓발사(2012.12.12)에 대한 1월 23일 UN 안보리의 제재(결의 2087호) 이후 최대의 관심사는 북한의 제3차 핵실험 여부이다. 역대 2회에 걸친 북한 핵실험은 모두 사전에 예고되었고 핵실험 이전에 미사일발사가 이루어졌다. 금번에도 예외 없이 미사일 발사가 실행되었고 핵실험은 예고되었다. 제3차 핵실험은 1월 27일 개최 사실이 보도된 ‘국가안전 및 대외부문 일군협의회’에서 김정은 국방위 제1위원장이 ‘국가적 중대조치’와 ‘구체적 과업’을 제시했다는 것에서 확인되며, 2월 3일 보도된 당 중앙군사위 확대회의에서 김 제1위원장이 ‘자주권을 지키기 위한 중요한 결정’을 내렸다는 것에서도 확인된다. 다만 다른 것은 지난 2회의 경우 북핵 실험 이후 UN 안보리 제재가 이루어졌으나 금번에는 안보리 제재가 먼저 발동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북한의 제3차 핵실험 가능성도 매우 높은 것이 현실이다. 그렇다면 북한은 왜 제3차 핵실험을 강행하려하는 것일까? 가장 중요한 이유는 대량살상무기 보유를 통한 체제 및 정권 유지 정책 때문이다. 체제 및 정권 유지는 어떤 한 가지 요인에 의해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대내외의 복합적 요인에 의해 달성된다. 내부적으로는 주민통합에 의해, 외부적으로는 무력공격 방지를 통해 이루어진다. 따라서 제3차 북핵 실험의 이유도 복합적일 수밖에 없다.

먼저 대내적 요인으로서 첫째, 김정일의 유혼 관철이다. 김정일은 2011년 10월 8일 장문의 유혼을 남긴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 중 핵문제와 관련해서 김정일은 “핵, 장거리미사일, 생화학무기를 끊임없

이 발전시키고 충분히 보유하는 것이 조선반도의 평화를 유지하는 길”임을 강조하였다고 한다. 선대수령의 지명에 의해 후계자 정당성이 도출되는 북한의 정치문화에서는 선대의 정치노선을 답습할 수밖에 없다. 만일 그것을 어기면 정치적 정당성이 소멸되거나 약화된다. 김정은도 예외는 아니어서 김정일의 노선과 유훈을 철저히 지킬 것이다. 견고한 분단구조가 약화될 가능성이 적은 상황에서는 ‘경로의존적(path dependency)’ 정책을 고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김정은은 판단할 수 있다. 전쟁이나 혁명 등 ‘경로전환적’ 상황이 발생하지 않은 채 이전의 경로를 바꾸는 것은 매우 위험하기 때문이다. 사실 경로를 바꾸면 더 큰 당근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독재자들은 경로변경으로부터 야기되는 조그마한 위험을 두려워하여 이를 채택하지 못한다.

둘째, 미북 간 및 남북 간 대결구조 하에서의 군사적 위대성 과시 필요성이다. 북한은 정세를 항상 비관적, 최악적으로 상정하는 경향성을 보인다. 북한은 주변강대국과 남한에 의해 포위되어 있어서 혼신을 다해 포위망을 돌파해야만 살 수 있다는 ‘빨치산식’ 상황인식을 한다. ‘피포위 의식’이 팽배해 있는 것이다. 이때 필요한 것은 군대와 주민의 일치단결 및 위대한 군사전략가 뿐이라고 북한 지도부는 생각한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위대한 전략가인데 그가 곧 수령이라고 북한은 주장한다. 따라서 수령 및 수령후계자는 전략가로서의 지혜와 어떤 난관도 헤쳐 나갈 수 있는 용맹성을 갖춰야 한다. 김정은은 현재 수령후계자로서의 학습을 진행 중이고 많은 주민들이 보는 앞에서 벌이는 미국과의 ‘치킨게임’에서 승리해야 하는 입장에 있다. 그는 이 게임에서 물러서면 ‘치킨(겁쟁이)’이 되고 수령으로서의 자격을 잃게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있다.

셋째, 핵능력 제고 필요성이다. 북한은 1, 2차 핵실험을 통해 플루토늄 핵무기 제조 기술을 습득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은 핵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핵무기보유국임을 확정하였다. 김정일 사망 이후인 2012년 4월 13일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12기 5차 회의를 통해 북한은 헌법 서문을 개정하여 ‘핵보유국’임을 명시한 것이다. 이후 북한은 미국까지 도달하는 핵 운반수단 보유를 과시하기 위해 2012년 12월 12일 장거리미사일을 발사하여 성공하였다. 북한 국방위원회는 1월 24일 성명을 통해 그 동안의 주장과는 달리 위성이나 장거리로켓 발사가 미국을 겨냥한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여기에서 문제는 북한이 핵무기를 대륙간탄도미사일에 장착할 만큼 소형화 했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미지수이다. 따라서 북한으로서는 핵탄두 무게를 1 Ton 미만으로 경량화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를 시험할 필요가 생긴 것이다. 이 경우 단순한 경량화뿐만 아니라 다탄두실험까지 하지 않겠느냐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넷째, 주민들의 자긍심 고양 및 통합의 필요성이다. 북한은 외교적 고립과 경제난으로 인해 주민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불안한 상태에 처해 있다. 더구나 최고지도자인 김정은은 나이가 어리고 경험도 일천한 상태이다. 뭔가 주민들의 사기를 높여주고 불안감을 해소시켜줄 수단이 필요한 상황이다. 가장 최선의 것은 경제개혁개방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 주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 채택하기 어려운 방책이다. 따라서 북한은 장거리로켓 발사와 핵무기 보유를 통해 주민들의 사기제고와 결속을 꾀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핵보유국 선언, 장거리로켓 발사 성공에 이어 핵무기 소형화 실험까지 성공한다면 주민들의 국가 및 정권에 대한 충성심은 높아질 것이고, 굶주림의 고통은 잠

시 달아나 버릴 것이다. 한편 북한은 이미 UN 안보리 제재 이후인 1월 26일부터 노동신문, 평양방송 등 각종 매체를 통해 ‘선군’을 강조하면서 ‘애국성전’을 부추기고 있다. 청년들이 자원입대하도록 유도하여 주민결속을 독려하고 있다. 북한은 외부의 대북 제재로 인해 경제난 극복을 위한 노력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경제난 책임을 외부로 돌리고 있다. 로켓발사 성공은 주민들의 자긍심 고양수단으로, 외부제재는 주민결속 수단으로 북한은 활용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대외적 요인으로서 대미 협상 수단의 필요성이다. 북한은 미국을 체제 위협의 제1 원인으로 규정하고 있다. 곧 주적은 미국이라는 인식이다. 따라서 북한은 체제 및 정권 유지를 위해서는 미국과의 담판을 통해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미국을 평화협정 테이블로 견인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가장 관심을 두는 핵무기를 개발해야 한다고 북한은 판단한다. 그러나 현실은 미국이 북한의 의도대로 움직여 주지 않고 있다. 미국은 오히려 더 강한 대북 제재를 시행한다. 미국에게 거의 절대로 항복할 수 없는 프레임에 갇혀 있는 북한은 핵능력을 제고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경험적으로 보았을 때 미국에게는 소위 ‘벼랑끝 전술’만 통한다는 ‘경로의존적’ 사고를 북한 지도부는 하고 있다. 김일성과 김정일은 생존 시 대미 강경책만이 미국을 협상테이블로 유인할 수 있다고 강조하였다.

위와 같은 다양한 이유로 인해 북한은 미국을 비롯한 외부로부터 체제 및 정권 안보가 담보되지 않는 한 첨단화된 핵무기 보유를 위한 핵실험을 지속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안타깝지만 우리의 독자적인 대북 안전 보장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우리의 힘만으로 3차 북핵 실험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미국을 비롯한 주변국과의 공조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제적 공조에는 제재와 대화 두 가지 모두가 포함될 수 있다. © KINU 2013

※ 이 글의 내용은 집필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통일연구원의 공식적 견해가 아님을 밝힙니다.